

전자 건강카드 반대 자료 모음(2)

1. 전자 건강보험증 대책 모임

- (가칭) 전자 건강카드 대책 모임 (준) 자료
- 전자건강 카드 시행 반대 사회단체 연대 모임 자료
- 전자건강카드 도입 반대를 위한 사회단체 간담회 자료
- 전자건강카드 도입 반대 종교, 인권, 노동,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자료
- 전자건강 보험증 도입, 부당·허위 청구 근절과 관계 없다:최용준(민중의료연합 정책센터)

2. 전자 건강보험 농성 투쟁

- 농성 투쟁 속보지 1회부터 7회까지 및 기타(보건복지 민중연대) 자료 모음 (최신후부터)
- 기타 다른 시민단체의 반대 글 및 신문기사 모음
- 최근 (2001년 9월)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사업에 대한 콘소시움 내용 및 자료

3. 정부 및 복지부 입장

-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 (초안)
-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 복지부 장관 기자회견 자료 (보험정책과)
-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 (보건복지부)

재벌기업특혜주는 전자건강카드 반대 성명
국민의 인권을 볼모로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 6.29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사업설명을 비판하며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건강카드 사업이 부당허위 청구 근절에 아무런 효과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개인 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제도라고 이의 도입을 비판해 왔다. 이에 6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이제까지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했던 내용에 대한 일종의 해명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해명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의문시 하는 점을 해소해주시는커녕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아울러 의혹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전자건강카드 사업에 대한 원칙과 내용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 보였다. 정부에서 전자건강카드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부 스스로 전자건강카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다. 뿐만아니라 전자건강카드 사업계획이 기업체로 구성된 5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컨소시엄에 사업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구체적인 원칙도 없이 전자건강카드 사업을 민간기업체에 내맡기는 꼴이 되어 국민적 우려를 더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둘째, 전자건강카드 사업이 사실상 재벌기업의 시장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자료에서 "IC칩은 국내 삼성전자, 현대 ICS 등이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시장수요가 없어 생산을 못하고 있음"이라고 적시하면서 전자건강카드 사업이 삼성과 현대의 재벌기업의 시장수요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는 속내를 밝혔다. 결국, 연대모임과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대로 전자건강카드 사업이 국민의 인권을 팔아 재벌기업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전자건강카드 사업추진비용 전액을 민간업체에서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수천억에 달하는 사업추진비용을 민간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만약 민간업체에서 사업비용을 전액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조건을 달려고 할 것이다. 실제 정부에서 신용카드 연계를 고려하는 결정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연간 17조에 달하는 의료비의 개인부담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매년 수천억을 신용카드 수수료로 국민들이 지불해야 하며, 카드 발급과 재발급에도 연간 수천억의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불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국민들을 기만하고 이를 합리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료에서 전자건강카드에 개인 신상정보와 처방전 내역만이 수록된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전자건강카드가 국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된다면 복지부의 설명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국회에 상정된 특별법안에는 카드에 수록될 정보와 사용방법 등이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카드 수록정보 등 중요한 사항들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카드 수록내용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문제는 특별법안에서조차 카드수록 내용을 통제

할 아무런 법적인 조치 조차 없다는 점에 있다. 또한, 애초에 정부는 전자건강카드 도입 목적이 의료기관의 부당, 허위청구 근절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정부발표와 자료를 통해서 부당, 허위청구가 근절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없다. 단지 국민편익 증대를 전자건강카드의 도입 목적으로 설명하면서 그것조차 환자의 조제 대기시간 단축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설명할 뿐, 국민의 입장에서 전자건강카드 사업 도입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가 정부 발표 초기부터 제기해 온 의료기관의 부당, 허위청구 근절에 효과가 없음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면서도 국민편익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거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인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여전히 국민들을 기만하면서도 궁색한 변명으로 전자건강카드의 도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넷째, 정부는 전자지문과 사진과 같이 본인확인 방식에 대한 핵심적 의혹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 정부의 설명대로 건강보험 자격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카드 소지자가 본인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전자건강카드를 제2의 전자주민카드로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IC 칩을 사용하건 마그네틱 카드 방식이건 국가신분증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신분확인을 한다는 것에서 전자감시사회의 도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없었고 여론수렴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건강카드 사업의 입법화를 무리하게 강행하려던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반발에 부딪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가 중단되었다. 정부는 시간이 갈수록 전자건강카드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우려는 커지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손으로 해를 가릴 수 없듯이 정부가 전자건강카드의 의혹을 손바닥으로 가리려 해서 안된다. 명분도 실리도 없이 국민의 건강과 인권을 불모로 재벌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전자건강카드 도입 계획은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1. 7. 3

전자건강카드 시행반대 사회단체 연대모임

발행일 2001년 6월 29일 / 발행인 신동근 / 발행처 건강보험투쟁 농성단 / 편집 농성단 선전국
주소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 전화 02-774-8774 / 전송 02-774-8773 / 연락 011-9084-0619

건강보험 종합대책과 특별법 철회 및 민중건강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열려 - 경찰 합법적인 1인 띠잇기 릴레이 시위마저 불허 -

6월 28일(목) 오후 4시 국회앞(한나라당 당사 대림산업 앞)에서 건강보험 종합대책 및 특별법 철회를 위한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이날은 농성에 참가하는 단체들을 비롯하여 한국통신 계약직, 건설운송노조 등 그간 농성단 참가단체가 진료지원등 연대사업을 벌인 노동조합원들이 참여하여 200여명의 인원으로 활기찬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은 대회를 통해 현 정부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분야에서도 재정파탄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후 보건복지민중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 노동조합 등으로 발언 순서가 이어지면서 연자들은 한결같이 현 정부의 민생파탄을 질타하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개혁이 실종된 현 정부와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하였다. 특히 노동조합원들은 노동자의 파업을 폭력적으로 짓밟는 현 정부가 기업주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고 있다고 격렬하게 성토했다.

집회이후 대회 참가자들은 계획대로 20m 간격을 두고 릴레이 1인 시위를 국회-민주당-한나라당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전개되는 1인시위는 50m도 나가지 못한채 전투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제지당했다. 선두에서 행진하던 우석균 인의협 정책실장이 갑자기 달려드는 완전무장한 전투경찰에 의해 제지당하자 뒤따라오던 행렬도 모두 그 진행이 정지되었다. 1인 시위 참가자들은 합법적인 1인 시위를 왜 막는가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는가라고 항의했지만 1인 시위로 볼수 없다는 형식적 답변이외의 어떤 답변도 듣지 못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근거없는 포위와 제지에 항의하며 그 자리에 연좌하여 약식집회를 가졌고 국민의 정부를 자처하는 현 정부가 국민의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의사표현마저 이제는 더 이상 들을 뜻이 없음을 확인되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현 정부는 재정파탄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부, '건강보험 특별법과 종합대책을 철회하라', '더 이상 낼 돈이 없다. 본인부담금 및 보험료 인상 철회하라'는 국민의 당연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합법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경찰을 동원해 탄압하는 정부이다. 우리는 묻는다. 국민의 이익과 최소한의 자유마저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억압하는 정부의 존재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사이버 시위 진행

6월 29일(금) 오전 10시-11시 30분,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사이버 시위를 힘차게 진행하였다. [환자부담 인상반대]라는 말머리를 달고 400여개의 글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나도한마디' 게시판에 올라갔다. 보험급여 축소반대, 보험료 결정권 박탈 반대, 민간의료보험 도입반대, 전자건강주민카드 반대의 내용으로 계속 글을 올림으로서 우리의 내용과 의사를 보건복지부와 그곳을 방문하는 국민에게 알려나갔다.

사이버시위는 김원길과 김종권 의원에게 항의메일을 발송하는 것으로 끝났다.

건강보험투쟁의 평가와 전망 토론회 열려

건강보험농성단은 민주노총에서 8시부터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준) 신동근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보건복지민중연대 이세연 대표와 강창구 건강연대 정책실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기획국원의 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각 단체가 건강보험을 둘러싼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활동을 벌어나갈지에 대한 토론회였다. 참가자들은 현재까지의 활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였고 향후 구체적 투쟁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참가자들은 각 단체가 이견을 넘어 공동의 목표를 향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참가자들은 또 건강보험농성평가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광화문에서 플래카드 시위 계속

어제 1시반부터 진행된 광화문 플래카드 시위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과대학생 등 6명으로 진행되었다. 상징적인 장소에서 대형플래카드를 건다는 것이 누군가를 매우 불편하게 한 탓인지 경찰이 집회신고내용은 전국민중연대의 '신자유주의 반대'인데 왜 플래카드내용은 왜 환자 본인부담인상반대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등 집회를 방해하였다. 이에 참가회원들이 경찰에게 신자유주의에 대해 친절히 설명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후 일정

농성단 해단식 및 정리집회
6월 30일(토) 오후 12시 국회앞 농성장소(한나라당 당사 옆)

김대중 정권 개혁파탄, 노동운동 탄압규탄 시국대회
6월 30일(토) 오후 2시 종묘(명등성당까지 행진)

집회 및 거리선전

6월 29일(금)	오전 8시 오후 12시 오후 1시~3시 오후 6시 30분	아침 거리선전 국회 앞 1인 시위 광화문 앞 집회 저녁 거리선전
6월 30일(토)	오전 8시 오후 12시 오후 2시	아침 거리 선전 농성장 정리집회 김대중 정권 개혁파탄, 노동운동 탄압규탄 시국대회(종묘)

건강보험, 문제가 많다는데 꼭 해야 되나요?

할 사람만 하고, 자율적으로 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게 낫지 않나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건강보험을 들고 싶은 사람만 들라고 한다면, 젊고 건강하고 한창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의료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가입을 기피할 것입니다. 반면에 병이 있고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대다수가 가입할 것입니다.

그러면 돈 내는 사람은 적고, 치료비는 엄청나게 나가게 되므로 얼마 안가 의료보험은 재정파탄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강제가입시키는 것이 전체 국민들간에 상부상조를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젊었을 때는 보험료만 내고 병원을 안 가니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노인이 되어 병원에 자주 가게 되면 내는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 의료보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모든 선진국에서 강제가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든 선진국에서는 전체 국민을 강제가입시키는 의료보험을 시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세금에서 돈을 내고 무료치료를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국민을 강제가입시키는 의료보험이 없는 나라가 미국인데, 그래서 미국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가 이 문제입니다.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중병에 걸리게 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가계지출이 이루어집니다.

사보험을 하는 미국에는 아예 보험가입을 못한 사람이 4500만명입니다.

미국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보험이나 기업주가 제공하는 기업의료보험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 없어서 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기업에서 의료보험을 안해주는 경우인데, 이런 이유로 의료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약 4천 5백만 명에 달합니다. 미국의 서민들에게 사보험이나 기업연금은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물론 개인이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사보험도 필요합니다. 다만 사보험은 공공의료보험이 서민의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하고, 이것만으로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공공의료보험이 부실한 상태에서 사보험이 과다하게 팽창되면 서민들은 의료혜택을 제대로 못받게 되고 의료의 불평등만 커지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미워서 건강보험을 못 믿겠다?

의료보험이 믿기보다는 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험기관을 못믿어서 보험 가입을 원치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진국도 전부 이런 공단으로 보험제도를 운영합니다. 문제는 가입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느냐 하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 보면 지금의 공단들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공단을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단이라는 조직을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사회보험노동조합도 공단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단이 국민에게 서비스를 강화하고 보험재정누수를 제대로 감시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저희 단체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건강보험제정 종합대책 및 제정건전화 특별법 철회를 위한
노동·시민·보건의료단체 공동 농성단**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준)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 보건복지민중연대(준) : 노동자의힘(준비모임), 민중복지연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전보와연대를위한보건의료운동연합,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부당한 보험료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 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1세기생협연대

[성명서] 국회 앞 농성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건강보험 종합대책 및 재정건전화 특별법' 철회를 위한 국회 앞 농성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6월 22일부터 7일째 진행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 종합대책 및 재정건전화 특별법 철회를 위한 노동·시민·보건의료단체 공동 농성단'의 국회 앞 농성 투쟁은 건강보험재정 위기를 노동자·민중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권 축소로 해결하려는 반민중적 법안인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김대중 정권의 오만한 횡포를 응징하고, 진정한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투쟁입니다. 최근 김대중 정권은 국내외 자본과 수구반동세력들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면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자 생존권 압살을 중심으로 전 민중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짓밟는 정책 기조로 일관하며 역대 정권이 보여주었던 비참한 전철을 되밟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실책이 바로 노동자·민중을 위시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신장시켜야 할 정부 자신이 도리어 아무런 책임도 없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가당찮은 '건강보험 종합대책'과 '재정건전화 특별법'입니다. 이는 김대중 정권이 자신의 정책적 무능력과 무책임성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건강보험재정을 건전화한다는 미명 하에 노동자·민중에 대해 일방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이미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지난 해부터 이어진 잇따른 보험료 인상과 살인적인 본인부담금 인상, 그리고 보험급여 축소는 빈약한 노동자·민중의 호주머니를 더욱 궁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도 모자라 김대중 정권은 가장 중요한 주체인 노동자·민중을 건강보험 운영과 재정파탄 대책 마련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예 배제시키고,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정부 자신과 가진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한 허구적인 대책 논의로만 치닫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김대중 정권의 모습은 비단 건강보험 재정파탄 대책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반 민생 관련 정책에서 똑같이 확인되고 있어, 민심을 완전히 도외시한 오만불손한 반개혁적 민생파탄 정권으로서 그들의 진면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이랜드 노동조합은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이 가열차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김대중 정권의 반민중적인 '건강보험재정 종합대책 및 재정건전화 특별법' 철회를 위한 국회 앞 농성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비록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진 못하지만 앞장서서 투쟁하는 동지들께 연대와 투쟁의 결의를 담아 힘찬 성원을 보냅니다.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이 승리하고 노동자·민중 건강권이 진정으로 보호되고 신장되는 그 날까지 힘차게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1. 노동자·민중 생존권 압살하는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2. 노동자·민중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건강권을 축소시키는 건강보험 종합대책과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 방침을 철회하라!
3. 국고 부담 50% 약속을 이행하라!
4. 불법 인상된 보험수가와 보험약가를 인하하라!
5. 전자건강카드 도입방침을 철회하라!

민주노총 전국민주화학섬유연맹 이랜드 노동조합

발행일 2001년 6월 27일 / 발행인 신동근 / 발행처 건강보험투쟁 농성단 / 편집 농성단 선전국
주소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 전화 02-774-8774 / 전송 02-774-8773 / 연락 011-9084-0619

건강보험특별법 저지 농성단 광화문 집회 시작해

지난 26일(화)부터 광화문 정문 해태상 앞에서 건강보험재정종합대책 및 재정건전화특별법 철회를 위한 노동·시민·보건의료단체 공동농성단의 선전전이 진행되었다.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국민은 더 이상 의료비를 낼 돈이 없다. 본인부담금 인상 철회하라’, ‘담배값 올리는게 국고지원이나,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50% 약속 이행하라’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광화문 앞을 지나는 차량을 대상으로 대국민 홍보를 하였다.

차량통행이 많은 광화문에서 선전전을 진행하는 동안 지나가는 시민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다. 광화문 시위는 매일 오후 12시에서 2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6월 25일 연행된 농성단 2인 불구속 26일부터 야간 농성 확보

6월 25일 오후 8시 경 농성장을 지키는 중 민중의료연합대표 이재준을 포함하여 2인이 경찰 측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농성단은 하루 일정을 끝내고 모여앉아 있었으나 경찰은 “집회를 하고 있지 않아도 집회의 연장선으로 보아야 한다”는 자의적 해석에 의해 강제 연행을 자행하였으며 결국 6월 26일 오후 10시 경 경찰은 불구속을 확정하고 농성단 2인을 풀어주었다.

경찰은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는 것도 집회 행위로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매일매일 농성단을 연행하였다. 이것은 “본인부담금을 인하하라”, “불법부당하게 인상된 수가를 인하하라”, “허위부담청구 근절하라” “국가와 기업주의 부담을 늘려라”라는 국민의 요구를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것이다.

26일 밤부터는 2인의 농성자만 유지하면 농성대오를 해산하지 않겠다는 약속 받고 농성장주변에서 더욱 많은 대오가 밤샘농성을 할 수 있었다. 매일매일 일몰이후에 농성장을 강제 해산당해도 다시 집결하여 농성을 계속하던 그동안의 투쟁의 성과로 야간농성을 따낸 것이다. 이에 농성단은 야간에도 안정적으로 농성장을 유지하면서 30일까지 정부의 건강보험재정대책과 특별법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획글>

제 2의 전자주민카드,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막아야 합니다

과거 '전자주민카드'라는 악령과 싸웠던 우리는 국민의 정부아래에서 다시 '전자건강카드'라는 유령을 만나야 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IC칩(전자칩)이 삽입되어 전자적 방식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건강보험증을 전자건강카드로 작성한다고 발표하고, 현재 국회에 '건강보험제 정건전화특별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전자건강카드제를 강행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건강카드는 제2의 전자주민카드이다

전자건강카드에 사진, 지문과 같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삽입되고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소지하게 되면 그것은 주민등록증과 같이 국가신분증이 됩니다. 그러나, 그냥 국가신분증이 아니라 현재의 주민 등록증보다 훨씬 더 강력한 통제기능을 갖는 국가신분증이 됩니다. 주민등록증의 경우 만17세 이상 3천6백만명에게 발급되는데 비해, 전자건강카드는 미성년자까지 국민 모두에게 발급되어 대상자가 4천6백만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전자건강카드에는 신용카드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면에서 과거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연계된 전자건강카드는 의료기관의 이용내역 및 치료행위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물건을 사고팔때나 금융거래시에도 이용이 되며 전철이나 버스 등 교통카드 및 전자화폐로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제 국민의 개인 사생활 기록이 전산망을 통해 저장되고 언제라도 추적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팔아 전자건강카드를 유지하려 하는가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자건강카드가 도입되면 국민의 개인의 개인정보 특히, 신체와 관련된 특이사항 등 핵심적인 개인정보들이 유출될 위험이 더 없이 증대된다. 전자건강카드는 개인의 치료 및 처방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특이체질인 경우 그 사항까지 기록되어 있어 유출될 경우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금결제에 위해 지불내역을 신용카드회사에 전송해야 합니다. 그렇게되면, 신용카드 회사에 진료 및 제약내역이 전송되어 환자의 병력사항과 투약내역을 볼 수가 있고 환자별, 의료기관별, 약제품별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현재 보험회사와 제약회사 등에서 핵심적으로 알고자 하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상업적 이용가치가 충분히 있어서 상업적 거래와 유출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정보들입니다. 이처럼 전자건강카드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팔아서 유지하는 반인권적인 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 근절 실효성도 의문시된다

한심한 것은 전자건강카드를 도입하더라도 의료기관의 부당, 허위청구를 근절시키는데 거의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진료내역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부당·허위청구가 가능하고 병원과 약국 및 환자의 담합을 통한 가짜환자 만들기에 전자건강카드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 병원에 가보더라도 당장 알 수

국민의 건강권을 파탄내는

건강보험 종합대책/ 재정 특별법 제정 방침을 철회하라!

2001년 6월 27일(수)

있는 사실입니다. 환자의 경우 진료내역서 작성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청구되는 내역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의사가 진료내역서와 처방전을 컴퓨터를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작성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사실상 부당, 허위청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전자건강카드를 사용하건 안하건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전자건강카드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근절에는 도움이 안되는 반면, 카드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연회비 등 제 비용을 상승시켜 실제 국민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켜 놓게 됩니다. 결국, 국민의 인권과 건강을 불모로 오직 카드업계에만 혜택을 주는 일종의 특혜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자건강카드제도인 것입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에 드는 비용을 3천억에서 6천억으로 추산하고 있고 그나마 정부에서는 이 모든 비용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정부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여기에 카드 발급 비용과 수수료 등 정부와 가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모두 빠져 있습니다. 실제 비용은 시스템 구축 비용 외에도 카드(재)발급, 수수료, 연회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비용을 추산해 보면 카드의 신규 발급비용은 대략 5천억에서 1조원 가까이 소요될 전망이며, 재발급 비용도 카드 분실, 훼손 및 신생아 출산에 따라 연간 4천억 이상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17조에 달하는 본인부담금을 전부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된다고 할 때, 그 수수료만 연간 5천억 가까이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건강카드 시행에만 시스템 구축비를 제외하고 2조원 가량 들게 되고, 매년 1조원씩 추가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 비용들은 모두 국민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으로 4인 가구당 18만원의 비

용을 들여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료의 재정누수를 막고 의료비를 절감하겠다는 이 제도는 거꾸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용도 비용이지만 개인정보유출과 국가감시통제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고려해 본다면 그 손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졸속과 기만으로 점철된 전자건강카드 도입 시도를 규탄한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건강보험재정전환특별법(안)'을 제정할 목적으로 국회에 상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론 수렴 과정도 없었고, 정부내에서 연구나 정책적 검토조차 미흡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특별법(안)을 상정하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범부터 제정해 놓고 이를 바탕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정부와 민주당의 발상은 도대체 민주국가의 행정부와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에 다름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자건강카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와 신체의 특이사항 등을 기관이 임의대로 변경, 저장할 수 있도록 열어주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일일 뿐입니다. 이 법안을 보면 그동안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해 왔는가 하는 사실도 스스로 자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자건강카드 시행에 필요한 재정은 전액 민자유치로 할 것이며 정부예산은 한푼도 들이지 않을 계획이라고 누차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법에는 전자건강보험증의 시범사업, 발급·시스템 구축 및 운영체계 개발, 시설·장비의 구축 등에 정부 및 공단의 재정을 지

국민의 건강권을 파탄내는

건강보험 종합대책/ 재정 특별법 제정 방침을 철회하라!

2001년 6월 27일(수)

원하고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카드 판독기 구입까지 정부와 공단에서 지불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전자건강카드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대략 1조5천억-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으며, 이 법안대로 하면 필요한 예산 중 상당부분이 정부예산 및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재정으로 충당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민주당이 거짓 선전과 술책으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국민의 피해와 부담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고,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이와 연관된 사업을 하는 기업만이 이득을 볼 상황이 분명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편익증대 효과가 거의없는 제도에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을 낭비하고, 또한 국민 건강을 위해 쓰여져야 할 보험재정의 낭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민주당은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전면 백지화하고 이를 합리화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전진화특별법(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못하면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이 제도의 시행을 막아야 합니다. 만약 정부와 민주당이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과 기만된 행동으로 일관하고 졸속으로 이 법안의 처리를 강행한다면 즉각 이 법의 폐지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범국민 저항 행동에 돌입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후 일정

6월 27일(수)

오전 8:00 - 9:00

아침선전전

오후 11:30 - 1:00

국회 앞 1인 시위

오후 1:00 - 3:00

광화문 앞 시위

오후 6:00 - 7:00

저녁 선전전

건강보험재정 종합대책 및 재정전진화 특별법 철회를 위한 노동·시민·보건의료단체 공동 농성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보건복지민중연대(준)(노동자의힘(준비모임), 민중복지연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진보와연대를위한보건의료운동연합,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부당한 보험료 인상반대와 건강보험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청년의료인회,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시민의모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1세기생협연대

건강 보험 농성 투쟁 속보 3호

발행일 2001년 6월 25일 / 발행인 신동근 / 발행처 건강보험투쟁 농성단 /
편집 농성단 선전국
주소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 전화 02-774-8774 / 전송
02-774-8773 / 연락 011-9084-0619

건강보험 종합대책, 특별법 철회 및
공공의료 쟁취 결의대회」 열려

6월 23일 여의도는 건강보험법 본인부담금 인상반대와 특별법 철회, 공공의료쟁취를 외치는 소리로 가득 찼다. 이날 3시에 건강보험농성투쟁단은 농성장소 앞에서 1차 결의대회를 열고 건강보험종합대책 및 특별법 철회의 뜻을 다짐하고 시민들에게 종합대책의 문제점 및 공공의료 실현의 필요성에 대해 알렸다. 보건의료민중 연대 이재준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신동근 보건의료단체연합(준) 대표는 대회를 통해 이미 본인부담이 극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본인부담금을 또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종합대책을 철회시키는 것이 보건의료인들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민중연대를 대표하여 집회에 참석한 홍근수 목사는 투쟁사를 통해 현 정권의 집권은 이제 모든 민생 부문에서 총체적 실패로 끝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민중의 힘을 모아 김대중 정권을 퇴진시키자고 말했다.

사회보험노동조합의 신재기 대외협력단장은 투쟁사를 통해 현 정부가 재정절감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재정낭비의 최대원인이 되는 허위부담청구를 하는 의사·약사에게는 한없이 약하여 수가도 제대로 못깎으면서 정작 의사약사들을 감시할 사회보험공단은 구조조정이 라는 명목하에 일방적 정리해고를 감행하고 국민을 봉으로 아는지 본인부담은 늘려놓고 있다고 정부의 무능력과 무소신을 질타했다. 조홍준 건강연대 정책위원장은 현 종합대책과 특별법의 잘못된 점을 각 조목마다 설명하면서 국고지원 50%를 하겠다는 며칠전의 장관발언이 물거품이 되고 담배값으로 건강보험재정을 대는 것은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파기하는 것의 잘못된 점, 그리고 사회연대성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사회보험에 엉뚱하게 '수익자 부담원칙'을 들이대는 정부의 반국민적이고 반 사회보장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성토하였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민중복지연대, 그리고 사회보험노조 및 보건의료노조, 건강연대 등의 회원 70여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는 여의도 공원

을 들며 시민들에게 우리의 주장을 알리는 행진을 한 후 4시 30분 경 해산하였다.

경찰의 농성장 진압 및 강제연행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 경찰 6월 22일, 23일에도 평화적 농성장 강제진압
및 강제연행을 계속 자행하다. --

경찰은 현 정부 외에는 아무에게도 불편을 주지 않는 농성을 계속 강제 해산시키고 있다. 6월 22일 8시 보건복지민중연대소속 회원 4명을 강제 연행하여 서울 외곽에 분산 소개시킨 이후 6월 23일 8시 경에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주영수 교수와 백한주 교수를 포함 한 4명의 의사회원들을 강제 연행하여 일산방면 자유로에 소개하였다. 농성자들이 일몰 후에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는 지속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있음에도 농성장을 침탈하여 사회 단체인사들을 강제연행하고 있다. 우리는 묻는다. 본인부담금 인하와 정부 건강 보험 종합 대책 및 특별법 철회라는 우리들의 주장이 도대체 누구에게 해가되는 주장인가? 23일 11시 경 강제해산 후 다시 모인 농성참가자들이 본인부담금 인하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자 경찰은 이를 떼라고 요구했다. 이에 농성참가자들이 한나라당 플래카드는 왜 걸려있느냐고 항의하자 경찰은 대답했다. "이 플래카드는 경고성 플래카드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정부 외에는 아무도 불편하게 하지않는다. 평화로운 농성자들을 폭력적으로 강제 해산시키고 강제 연행하는 경찰의 행위가 도대체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가? 경찰은 강제진압 및 강제연행을 즉각 중지하라! 영등포 경찰서장은 반복되는 폭력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강제진압 및 연행을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농성일지》

6월 22일(토)

7시 30분 - 9시 : 오전 거리선전전

12-1시 : 국회 앞 및 민주당사 1인 시위

3시 : 건강보험 종합대책, 특별법 철회 및 공공의료 쟁취
결의대회

4시 - 4시 30분 : 거리행진

8시 : 농성장 강제진압 및 보건복지민중연대 소속 회원 4
인 연행

11시 : 철야농성재개

6월 23일(일)

9시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농성참가

- 2시 : 참된의료실현을 위한 한의사회 농성참가
- 5시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회원 16인 농성참가
- 8시 : 농성장 강제진압 및 인의협 회원 4인 연행
- 10시 30분 : 철야농성 재개

6월 24일 (월)

- 7시30분 - 9시 오전 거리 선전전
- 12시 - 1시 : 국회 앞 및 민주당사 1인 시위와 점심 선전전
- 7시 - 8시 : 저녁 선전전

건강보험종합대책 및 특별법철회와
공공의료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결의문

더 이상 어떻게 의료비를 더 부담하라는 것인가?
본인부담금 인상계획을 철회하고 건강보험특별법을 철회하라

국민의 정부는 국민건강과피정부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새천년민주당은 새천년에 민주시민의 민생복지를 확실히 짓밟은 정부로 기억되기를 원한단말인가? 현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종합대책과 건강보험특별법은 한마디로 국민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반민증적 조치이다. 그것은 재정건전화라는 미명하에 현 정부의 실정의 책임을 민중에게 전가하는 악법이며 국민건강말살조치일 뿐이다.

건강보험재정이 96년 이후 계속되는 적자를 낸 원인이 국민이 돈을 덜 내서였던가? 아니다. 그것은 국고지원액이 애초 약속보다 턱없이 모자랐던 것이 원인이었다. 작년 한해 재정적자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것이 국민의 의무분업제도의 불편함을 참지 못하여서였던가? 아니다. 그것은 무능력과 무소신으로 일관한 현 정부의 실정 탓이다. 도대체 국민건강이 상업적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 보건의료제도 속에서 국민이 무슨 이익을 보았다는 말인가? 무제한의 자유속에서 떼돈을 번 것이 국민이었던 말인가? 아니다. 이익을 본 자들은 병원경영자들과 제약회사들과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들, 그리고 일부 의사·약사들 뿐 이었다. 그렇다면 현재의 재정적자를 누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인가? 아무 잘못도 없는 국민이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인가? 국민이 이 모든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한단 말인가? '국민의 정부'와 '새천년 민주당'은 바로 그렇다고 대답한다. 국민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국민이 돈을 더 부담하고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그들은 말한다. 나아가 그들은 국민이 보험료를 결정하는 제도에 조금이나마 참여하던 권리마저 이제는 박탈하겠다고 말한다.

도대체 대명천지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단 말인가? 국민이 봉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런 조치를 국민의 정부를 자처하는 현 정부가 어떻게 이런 조치를 강행한단 말인가? 전 국민 사회보험을 시행하는 나라치고 우리나라처럼 본인부담금이 높은 나라가 있

단 말인가? 여기에 일시에 외래 본인부담금을 40.6%나 일시에 인상하는 조치를 어떻게 국민에게 강요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은 무섭지 않고 병원과 의사·약사들과 제약회사들은 그토록 무섭단 말인가? 부당한 수가는 깎지도 못하고 무한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행위 별 수가제는 손도 못 대면서 국민만 부담을 더 하라니 진정으로 국민은 봉이란 말인가? 게다가 이제는 아예 보험료를 결정하는 제도 속에서 국민의 결정권을 아예 박탈해 국민은 짝 소리도 내지 말라니 어떻게 국민이 이런 조치를 두 눈 뜨고 참을 수 있단 말인가?

더욱이 현 정권은 고통분담을 하자면서 정작 정부가 지원하겠다고던 지역의보재정 50%도 슬그머니 담배값 부담으로 옮겨 놓는다. 정부의 약속은 휴지조각인가? 담배값까지 털어 국고 지원이라 우기는 것인가? 기업주 보험료 부담은 50%로 고정하고 정부지원은 줄이고 국민 부담은 확실히 늘이는 대책이 어떻게 고통분담이고 어떻게 민생정책이란 말인가? 오로지 국민부담만 늘이는 정부종합대책과 특별법을 어떻게 국민고통전담대책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현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종합대책과 특별법이 국민에게 일방적인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고 보험료 결정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악법중의 악법임을 선언한다. 더욱이 특별법은 재정절감에는 효과가 없고 국민전체를 통제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전자건강카드제도를 포함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특별법의 통과를 결단코 용납할 수가 없다. 종합대책과 특별법의 통과는 곧 국민건강의 파괴와 민주주의적 권리의 훼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요구＝

1.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참여권한을 확대하고, 제도화하라
 -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지역가입자에 대한 50% 국고지원을 즉각 실현하고 저소득 직장인에 대한 국고지원방안을 마련하라
 1. 본인부담금 인상, 보험혜택축소계획을 철회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라
 1.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인상된 보험수가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보험약가를 즉각 인하하라.
 1. 근본적 보건의료제도 개혁으로 국민건강권을 실제로 실현하라
- 건강보험재정 종합대책 및 재정건전화 특별법 철회를 위한 노동·시민·보건의료단체 공동농성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보건복지민중연대(준)(노동자의힘(준비 모임), 민중복지연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진보와연대를위한보건의료운동연합, 평 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 연합(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부당한 보험료 인상반대와 건강보험개혁을 위한 노동·

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기독교청년의료인회,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시민 의모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1세기생협연대

건강보험재정 종합대책 및 재정건전화 특별법 철회를 위한
노동·시민·보건의료단체 공동 농성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보건복지민중연대(준) (노동자의힘(준비모임), 민중복지연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진보와연대를위한보건의료운동연합,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 협의회,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부당한 보험료 인상반대와 건강보험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청년의료인회,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시민의모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1세기생협연대

제2호 건강 보험 농성 투쟁 속보 2호

발행일 2001년 6월 22일 / 발행인 신동근 / 발행처 건강보험투쟁 농성단 / 편집 농성단 선
전국 / 주소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 전화 02-774-8774 / 전송 02-774-8773 / 연
락 011-9084-0619

폭력경찰, 건강보험 공동농성단 연행!

어제 오후 9시 30분 경 한나라 당사 옆 대림산업 앞에서 농성 중이던 공동농성단 (신동근
보건의료단체연합(준) 대표 외 12인, 민주노총 정책부장 1인, 민중의료연합 5인, 민중복지연
대 3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2인, 건강연대 1인)을 연행했다. 농성단은 연좌하여 비폭력
으로 항의하고 있었으나 폭력경찰은 농성단의 사지를 들어내고 농성장에 설치되었던 피켓과
선전물 등을 강제로 압송하는 등 정당한 요구를 하는 농성단을 폭력적으로 강제연행 하였
다.

무엇이 두려웠는지 경찰은 영등포 경찰서가 아닌 서울 외곽지역인 석수, 안양 등지로 연행
차량을 몰았으나 농성단은 "우리를 경찰서로 데려가라!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 경찰서에 가
서 시시비비를 가리자! 우리의 요구와 실천은 정당하다!"고 공동으로 주장하며 연행과정
에서도 힘있게 싸웠다.

본인부담금 인상과 전자건강카드 도입 등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건강보험 특별법은
그야말로 돈이 없으면 아프지도 말라는 선포이자 민중을 철저한 자본주의적 통제 하에 두겠
다는 정권의 의도를 담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될 정권과 경찰의 폭력에 맞서서 농성투쟁과 이후의 의료의 공공성을 쟁취하
기 위한 싸움을 힘있게 전개할 것입니다.

▽ 함께 합시다 ▽

건강보험 종합대책 및 특별법 철회와 공공의료 쟁취 결의대회

장소 : 한나라당 옆 대림빌딩 앞 농성장

시간 : 6월 23일(토) 오후 3시

<성명>

국회앞 건강보험 농성단에 대한 폭력진압을 규탄한다

- 정부는 이제 평화적 항의마저 폭력으로 진압하는가? -

6월 22일 오후 9시 30분 건강보험종합대책과 건강보험특별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앞 건강보험 농성투쟁단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강제 진압되었다. 농성장을 평화롭게 지키던 노동, 농민, 시민사회, 보건의료단체 소속 회원 13명이 이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연행되었고 농성장은 구둑발로 짓밟혔으며 플랭카드는 찢겨졌고 여러 물품들이 파손되고 현재 그 행방을 알 수 없다.

국회 앞 건강보험 농성단은 5월말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종합대책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재정특별법이 건강보험재정을 건전화한다는 미명 하에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국민의 보험료 결정권을 박탈하는 반국민적인 조치임을 국민에게 알리고 민주당과 국회에 항의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가지고 농성에 들어간 바 있다.

건강하게 살 권리를 박탈하려는 조치에 저항하고 정부에 대한 자신의 반대의사를 밝히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에게 정부의 반민중적인 조치에 반대하는 평화적인 의사표출의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평화롭게 농성을 전개하는 사회단체인사들까지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는 것은 현 정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기초적인 의지조차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현 정부가 단지 일몰 후의 집회는 불법이라는 형식상의 논리를 내세워 현 정부 이외에는 아무도 불편해 하지 않는 평화로운 거리농성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것은 현 정부가 이제 자신에 대한 어떠한 반대의 소리도 용납치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이다. 더욱이 농성참가자들이 일몰 후 어떠한 집회 및 시위를 가지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경찰은 농성단을 폭력적으로 진압하였다. 도대체 이러한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세계의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단 말인가?

우리는 정부의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정부의 행동에 맞서 우리의 농성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행동을 막아보겠다는 정부의 행동은 더욱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는 어떠한 탄압이 있을지라도 국민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대책과 특별법 제정을 막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에 '건강보험재정 종합대책 및 재정건전화 특별법 철회를 위한 노동·시민·보건의료단체 공동 농성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 앞 건강보험 농성투쟁단에 대한 폭력적 강제진압에 대해 해당 경찰서장은 공개적으로 사죄하라.
1.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참여 권한을 확대하고, 제도화하라
 -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지역가입자에 대한 50% 국고지원을 즉각 실현하고 저소득 직장인에 대한 국고지원방안을 마련하라

1. 본인부담금 인상, 보험혜택축소계획을 철회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라

1.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인상된 보험수가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보험약가를 즉각 인하하라.

1. 근본적 보건의료제도 개혁으로 국민건강권을 실제로 실현하라

2001년 6월 23일

건강보험재정 종합대책 및 재정건전화 특별법 철회를 위한 노동·시민·보건의료단체 공동농성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보건복지민중연대(준) (노동자의힘(준비모임), 민중복지연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진보와연대를위한보건의료운동연합,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부당한 보험료 인상반대와 건강보험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청년의료인회,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시민의모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증양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1세기생협연대

[속보] 건강보험 농성투쟁 1호
건강보험 농성투쟁 <제 1 호>

발행일 2001년 6월 22일/ 발행인 신동근/ 발행처 건강보험투쟁 농성단/
편집 농성단 선전국 주소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전화 02-774-8774/ 전송 02-774-8773/ 연락 011-9084-0619

철회!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대책/ 재정건전화 특별법
-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 종합대책 철회를 위한
국회 앞 농성 투쟁 시작돼 -

6월 2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민주노총, 보건복지민중연대(준), 보건의료단체연합(준), 부당한 보험료 인상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으로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대책 및 재정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회 앞 농성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오늘(22일) 오전 10시 여의도 한나라당 사 옆 대림산업 빌딩 앞에서 정광훈 전농 의장,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대책과 재정건전화 특별법은 노동자 민중 부담 전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종합대책과 특별법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동자·민중의 건강권 실현을 염원하는 단체와 개인은 농성장에 결합해 주십시오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특별법은 건강보험재정 위기를 '노동자·민중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권 축소'로 해결하려는 반민중적 법안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반민중적 시도를 막기 위한 농성 투쟁에 참여해 주십시오. 노동자·민중의 건강권 실현을 염원하는 단체와 개인이 함께 모여 투쟁할 때, 정부의 반민중적 시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농성 투쟁 계획>

6월 23일(토) 정부종합대책 철회와 공공의료 쟁취 결의대회

장소 : 한나라당 옆 대림빌딩 앞 농성장 *시간 : 오후 3시

노동자 민중에게 경제적 부담 전가, 건강권 축소하는 건강보험 종합대책/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 방침을 철회하라!

노동자·민중은 현 정부의 국민 건강에 대한 정책적 무능력과 무책임성으로 인해 충분히 고통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잇따른 보험료 인상과 살인적인 본인부담금 인상, 그리고 보험급여 축소는 빈약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더욱 궁핍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 건강보험재정을 건전화한다는 미명 하에 노동자·민중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참여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분명한 의도를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

정부 '담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정부는 결정권은 없고 심의만 할 수 있으며 결정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지는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보험료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면 정부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려는 것이다.

전자건강카드 도입방침을 철회하라

부당·허위 청구를 방지할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정부가 선전하고 있는 전자건강카드는 전자 지문감식을 계획하는 등 강력한 주민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

국고 부담 50% 약속을 이행하라

특별법에서는 지역가입자가 보험급여비용과 공단운영비의 40%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10%를 담배 1갑 당 150원을 담배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의보 총재정의 50%를 국고로 부담하겠다고던 당초의 약속을 완전히 백지로 돌리는 것이다. 취약한 공공의료와 건강증진 활동을 위해 사용해야 할 건강증진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민중의 주머니를 털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하라!

불법 인상된 보험수가와 보험약가를 인하하라

감사원 감사결과 작년 시행된 수가인상은 불법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보험약가가 실거래가보다 높게 책정되었다는 사실 또한 명백하다. 따라서 의사의 진찰/처방료와 실효성 있는 실거래가 조사로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보험 약가는 즉각 인하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재정 종합대책 및 재정건전화 특별법 철회를 위한 노동·시민·보건의료단체 공동 농성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보건복지민중연대(준)(노동자의힘(준비모임), 민중복지연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진보와연대를위한보건의료운동연합,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부당한 보험료 인상반대와 건강보험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청년의료인회,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시민의모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증양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1세기생협연대

[속보4호]전자건강카드시행반대

<속보4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전자건강카드' 반대운동

2001.6.22(금) / 전자건강카드 시행반대 사회단체 연대모임

***** 46개 사회단체, 전자건강카드 백지화 촉구 *****

21일 오전 기독교연합회관에서 46개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전자건강카드 도입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회단체들은 전자건강카드 도입계획 백지화와 국회에 제출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철회를 요구했다.<인권하루소식 6월 22일자 기사 참조>
*기자회견 자료가 필요한 분은 redfrog4@shinbiro.com 으로 연락주세요.

***** 전자건강카드, '초감시국가 발상' *****

** 인권사회단체 전면반대, "일상생활까지 관리" **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충격을 틈타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졸속 강행하려는 보건복지부에 인권 사회단체들이 도전장을 던졌다.

사회진보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46개 인권사회단체는 21일 오전 10시 기독교연합회관 902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허위 청구를 방지하지도 못하고 개인정보까지 유출하는 전자건강카드의 시행방침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는 "전자건강카드는 개인정보를 국가가 통제하여 국민에 대한 초감시국가를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자건강카드가 신용카드·교통카드의 기능을 겸하게 될 때, 개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이 전산망을 통해 저장된다"며, "이렇게 됐을 때 국가는 자신의 구미에 맞는 정보만 선별하여, 국민들의 삶을 자기방식대로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관료집단이 개인정보 '좌지우지' **

한 교수의 경고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현재 전자건강카드 발급대상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3천6백만여 명을 훨씬 초과한 4천5백만여 명이며, 전자건강카드에 사용될 IC칩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회귀질환 등 개인병력 사항을 한꺼번에 수록할 수 있다. 또한 의료비 결제 등의 필요성으로 신용카드와의 연계가 적극 검토되고 있기에, 소수의 관료집단에 의해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인 강내희 교수(중앙대 영문학)는 이와 같은 상황을 러시아에 빗대었다. 현재 러시아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마피아는 구소련의 지배관료 출신. 강 교수는 "관료집단이 타락할 경우에 국민들이 직면하게 될 무시무시한 상황"을 상상해 보라며, "특히 소수의 관료집단이 국민들의 정보를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민중연대 강동진 건강보험특위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진료비의 부당허위 청구 근절'에도 전자건강카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진료비의 부당허위 청구는 병원·약국·환자의 진료비 담합과 처방후 진료비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전자건강카드는 이에 대해 속수무책이라는 것. 처방 후 7일 이내에 전자건강카드를 가져와도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전자건강카드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침묵하는 가운데, 전자건강카드 시행의 근거를 제공하게 될 국민건강보험재정안정화특별법안이 지난 18일 국회에 회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법안을 오는 26일경 상임위에 상정하고 27일 법사위원회 및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킬 태세다. 따라서 전자건강카드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인권사회단체들과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범용]

***** 국회 상임위 연장...관련법 통과 초읽기 *****

국회가 당초 예정되어 있던 상임위원회 기한을 22일에서 다음주로 연장함으로써, 다음주초 열리는 상임위에서 전자건강카드 관련법안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건강카드 시행반대 사회단체 연대모임'의 활동 역시 급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단체 연대모임은 22일(금) 오후 7시 30분 사회진보연대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다음주 국회일정에 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

전자건강카드 시행반대 사회단체 연대모임 3차 회의

- 22일(금) 오후 7시 30분 / 용산구 갈월동 사회진보연대 사무실(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1번 출구에서 7분거리)
 - 문의 : 778-4001(사회진보연대 홍석만)
 - 연대모임은 사회단체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

[국회앞 농성단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건강보험재정종합대책 및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재정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제시한 건강보험재정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재정건전화'라는 미명하에 서민에게 일방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참여권을 봉쇄하는 것이다.

이미 국민은 현 정부의 정책적 무능력과 무책임성으로 인해 충분히 고통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보험료 인상과 본인부담금 인상은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더욱 궁핍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정부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으로 본인부담을 인상하고 보험혜택을 축소하였다. 이제 정부는 '재정건전화' 특별법으로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참여 권한을 축소시키고 국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전가를 제도화하고 있다.

재정건전화특별법 과연 무엇 때문에 만드는 법인가?

○ 특별법이 과연 필요한가?

우리는 먼저 특별법이 과연 필요한가를 묻는다. 법안의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하면 된다. 만일 수가인상을 수년 간 동결한다든지 또는 보험급여의 확대 이외에는 보험재정을 현 상태에서 동결한다든지 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특별법의 형태로 만들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 정부 '맘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특별법의 가장 큰 문제는 보험료 결정권이 있는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를 없애고 이를 결정권이 없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 통합하는 것이다. 이것은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참여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특별법에 명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는 기존의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및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보다 훨씬 후퇴한 것이다. 정책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가입자 대표 8인, 의약계 대표 8인, 공익대표 6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익대표 6명 중 5명이 모두 정부와 보험자단체 몫으로 할당되어 있다. 즉, 무늬만 '공익'인 정부 및 보험자와 의약계가 서로 합의를 하면, 가입자 대표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급여 축소를 언제든지 할 수 있게 제도화된 것이다.

간단히 말해 재정건전화특별법안은 수입과 지출을 맞춘다는 명목하에 국민의 보험료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정부의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현 정부의 행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문제를 봉합하려는 것이다.

○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계획을 철회하라

정부가 부정·허위청구의 획기적 근절책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 역시 심

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전자건강보험증이 부당·허위청구를 방지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거니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문제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전자건강보험증은 IC칩 사용과 신용카드 겸용은 물론 본인확인을 위해 전자지문감식에 대한 계획까지 제출되는 등 사실상 그 기능이 과거 전자주민카드보다도 더 강력한 주민통제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의료정보사업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의료정보사업의 기본적 인프라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건강카드가 논의되는 것은 선후가 완전히 어긋난 것이다. 간단히 말해 전자건강보험증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고 의료정보사업으로도 가치가 극히 의심스러운 사업이다.

더욱이 현재 특별법에는 전자건강카드 수록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의로 정하게 되어 있다. 카드수록 내용을 언제든지 변경, 늘려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지부장관에게 수록범위를 위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 국고지원 50%를 약속을 이행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담배부담금을 철회하라
특별법에서는 지역가입자가 보험급여비용과 공단운영비의 40%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10%를 담배 1갑당 150원을 부담하는 담배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의보총재정의 50%를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완전히 백지로 돌리는 것이다.

담배부담금은 순수한 국고지원과는 성격이 다르며 간접세의 성격을 띠어 완전히 역진적이다. 더구나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흡연률이 높기 때문에 이는 더욱 역진적이다. 이는 건강보험재정을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또 다른 문제는 2001년 7월 1일부터 5인 미만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2002년까지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76만 명(지역가입자의 3.2%)이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애초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소득 직장 가입자에게도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재정건전화 특별법은 반국민적인 '재정대책'이다

지난 5월 말 발표되었던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대책에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은 '국민에 대한 부담 전가책'의 결정판이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보험료결정권을 빼앗음으로서 국민의 민주적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경제적 비용 전가를 안정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본인부담금 인상 및 보험혜택 축소계획 철회하라

○ 국민의 본인부담은 이미 너무나 높다. 더 이상의 본인부담인상을 거부한다.

정부는 종합대책의 하나로 정액내 본인부담금을 현행 3200원에서 4500원으로 40.6%를 올리는 조치를 7월 1일부터 시행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본인부담금은 OECD국가의 본인부담금이 10-20% 선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본인부담율이 50%를 넘고 외래본인부담율은 67%에 이른다. 또한 본인부담금은 작년의 수가인상으로 1850원이 이미 올랐다. 여기에서 더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불필요한 외래를 줄이는 조치가 아니라 서민의 필수적인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조치일 뿐이다.

○ 보험혜택 축소계획 철회하라

정부는 종합대책에서 2006년까지 급여확대가 없다고 공언함으로써 산전진찰, 어린이 예방접종등 보험혜택을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약속한 사항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또한 7월 1일부터 스케일링을 보험항목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 도대체 여기서 더 이상 보험혜택을 줄이면 건강보험에 무엇이 남는단 말인가?

불법적이고 부당한 보험수가인상분과 보험약가를 인하하라

○ 불법적이고 부당한 수가인상분은 인하되어야 한다.

금번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작년 한해동안의 수가인상은 축소되고 불법적이었으며 근거없이 부당하게 인상되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인상된 진찰·처방료와 조제료는 즉각 인하되어야 한다.

○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약가를 인하하라

보험약가가 실거래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명백하다. 종합대책에서는 현재의 실효성 없는 조사방법을 고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제약회사에 약한 정부의 모습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주었다. 실효성 있는 실거래가 조사로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보험약가는 즉각인하되어야 한다.

보건의료제도 및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실시하라

우리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반국민적인 계획안대로 대책안과 특별법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직면한 건강보험재정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현재의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통제할 수 없는 의료공급제도를 유지하는 한 재정대책은 결국 밑빠진 독의 물붓기 이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위별수가제의 폐지와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기관의 대폭확대, 정부와 기업주의 부담확대를 포함하는 근본적인 건강보험제도 및 보건의료제도의 개혁이 실시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과 특별법 제정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해 국민건강권의 실현을 염원하는 제 단체와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요구

1.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참여권한을 확대하고, 제도화하라

-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지역가입자에 대한 50% 국고지원을 즉각 실현하고 저소득 직장인에 대한 국고지원방안을 마련하라

1. 본인부담금 인상, 보험혜택축소계획을 철회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라

1.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인상된 보험수가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보험약가를 즉각 인하하라.

1. 근본적 보건의료제도 개혁으로 국민건강권을 실제적으로 실현하라

2001년 6월 2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준)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 보건복지민중연대(준) : 노동자의힘(준비모임), 민중복지연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진보와 연대를위한보건의료운동연합,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부당한 보험료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 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청년의료인회,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1세기생협연대

[속보2호] 전자건강카드 시행반대

<속보2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전자건강카드' 반대운동

2001.6.20(수) / 전자건강카드 시행반대 사회단체 연대모임

*** 계속되는 국회 앞 1인시위 ***

18일에 이어 19일에도 '전자건강카드 시행반대 사회단체 연대모임' 활동가들의 국회 앞 1인 시위가 이어졌다. 이날은 민중의료연합의 최용준씨와 참여연대의 문혜진씨가 각각 시위에 참여했다. 한편, 서울영상집단은 전자건강카드 반대운동을 영상에 담기로 한 가운데, 1인 시위를 비롯한 각종 활동을 밀착 취재하고 있다. 20일엔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 소속 활동가들이 계속해서 1인 시위에 참여한다.

**** 김홍신 의원 "전자카드, 국민인권에 치명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방문도 전날에 이어 계속됐다. 전용원 보건복지위원장실을 비롯해 면담에 응한 의원실들은 대체로 전자건강카드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전자건강카드가 이번 국회에서 법제화되는가의 여부는 오는 22일경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설령 이번 국회에서 전자건강카드의 법제화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를 관철시킬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법 제정후 1년 뒤, 혹은 2001년 9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것을 못박아 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홍신 의원은 "전자건강카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일단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 인권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자건강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

전자건강카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자료집을 통신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분은 연락바랍니다.

문의: tspspp@jinbo.net / redfrog4@shinbiro.com

● 이후 행동프로그램 ●

◇ 국회앞 1인 시위 사흘째: 6월 20일(수) 오전 11시 30분 - 1시 30분

시위참가자: 이창조(인권운동사랑방), 정은성(천주교인권위원회)

◇ 전자건강카드 반대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 6월 21일(목) 오전 10시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902호

: 사회단체의 입장표명에 동참할 단체는 연락바랍니다.

: 문의 741-5363(이창조) / 778-4001(홍석만)

<가상 시나리오> 전자건강카드 시대의 자화상

** 제2의 전자주민카드 - 전자감시, 개인정보유출 위험 상존 **

전자건강카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병력(病歷)사항, 진료내역, 이름, 혈액형 등 각종 개인 정보가 담긴 전자(혹은 자기) 카드를 실용화시킨다는 엄청난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과거 전자주민카드 계획과 맞먹는 인권침해 소지와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6월 국회,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계획을 세우고, 벌써부터 사업자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건강카드가 상용화될 경우 예상되는 일들을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그려봤다. [편집자주]

시나리오 1.

영화배우 박영자 씨가 '연예활동 중단'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과거 성병(性病)에 걸렸던 사실이 한 연예잡지를 통해 폭로되면서 박 씨에겐 온갖 억측과 비난이 쏟아지던 터였다. 연예잡지사도 박 씨의 병력정보가 흘러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단서는 전자건강카드였다. 박 씨는 얼마전 자신의 전자건강카드를 분실한 일이 있으며, 그것을 입수한 한 해커가 전자건강카드를 통해 박 씨의 병력정보를 풀어내고, 이를 연예잡지사에 팔아넘겼던 것. 박 씨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 사이에선 전자건강카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시나리오 2.

경찰청이 경찰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개개인의 각종 정보가 전산화되고 하나의 망으로 통합관리됨에 따라, 그동안 '발품'을 팔아 정보를 수집해왔던 인력들이 이제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게 된 까닭이다.

경찰 내부에까지 구조조정의 바람을 몰고 온 공신은 전자건강카드. 2002년부터 시행된 전자건강카드가 이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제치고 가장 광범위한 국가신분증으로 자리 잡았으며, 각종 관공서나 대중교통 이용에도 사용됨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활동을 전산조회만으로도 확인하기 쉬워진 결과다. 구조조정 앞에 직면한 현직 정보과 형사들 사이에선 살아남기 위한 '전산학습'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한다.

시나리오 3.

건망증이 있는 회사원 김경태 씨는 오늘 또 회사에 지각했다. 회사출입증을 집에 두고 출근한 탓에 다시 집까지 되돌아간 일이 이번 달 들어서만 다섯 번째다. 전자건강카드의 지문을 확인하기 위한 단말기가 전국의 병·의원으로 보급된 이래, 사회 곳곳에 전자지문 감식시스템이 들어서더니, 김 씨의 회사도 얼마 전 직원 출근부를 전자지문감식장치로 교체했다. 김 씨는 "건망증을 탓해야 할 지, 전자카드를 탓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담배만 연신 피워댔다.

시나리오 4.

지섭이의 일기. "... 나는 오늘 또 엄마에게 야단을 맞았다. 병원에 갔다오다가 전자건강카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엄마는 '그게 공짜로 발급하는 건 줄 아냐'며 돈타령을 하셨고, '카드 발급받을 때까지 아프지도 마'라며 마구 화를 내셨다. 엄마는 또 '정부가 맨날 국민 호주머니만 텅다'고 혼잣말을 하셨다. 카드 하나 때문에 하루종일 기분이 우울했다."

시나리오 5.

오늘 하루 병원전산망이 마비되면서 환자들이 심한 불편을 겪었다. 전산망의 마비와 동시에 전자건강카드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장시간 처방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속출했던 것. 환자 이미영씨는 "환자들에게 1분이 하루와 맞먹는 시간"이라며 당국의 안이한 대처를 비난했다. 2002년 전자건강카드가 시행된 이래, 전산망 장애에 따른 병원대란은 이번이 세 번째다.

시나리오 6.

삼대SDI와 현성카드의 주가는 어디까지 치솟을까? 2001년 전자건강카드 사업권을 따낸 두 회사가 주식시장의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자건강카드에 신용카드기능이 부가된 결과,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된 현성카드는 연간 4천억원 이상의 순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자 지문감식단말기 보급과 각종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맡은 삼대SDI 역시 매년 엄청난 매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차기 전경련 회장은 두 회사 가운데 한 쪽에서 나올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인권운동 사랑방 이창조]

[제안]건강보험 정부대책철회 2차 사이버시위

민중연대(준)

"본인부담금인상·정부종합대책 철회하라"제 2차 사이버 시위"

* 건강보험재정파탄에 대한 정부 종합대책 철회를 위한 사이버 시위에 적극 동참합시다.

1. 상황

- 2001년 5월 31일 정부가 '건강보험재정파탄'에 대한 정부종합대책 발표
- 중심내용 : 본인부담금 인상, 보험급여 축소,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제시함. 국고지원 50%가 논의되고는 있지만 내년에는 의료보험료 인상을 상정하고 있는 등 노동자·민중의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음.
- 한계 : 1) 근본적인 건강보험재정확충방안이 아님. 2) 노동자·민중의 부담증대를 전제로 함. 3)노동자·민중의 건강권확보와는 거리가 먼것임.

2. 주최 : 민중연대

3. 일정 : 2001년 6월 7일(목) 늦은 9시~10시

4. 시위 사이트

-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윗면 메뉴의 '나도 한마디'의 여론마당

5. 말머리

- 본인부담금인상반대
- 보험급여축소반대
- 정부대책 철회하라
- 국민건강보험노동자 구조조정 반대
- 전자건강보험증 도입반대

6. 방법

- 1) 6월 7일 밤 9시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창을 여러개 띄운다.
- 2)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윗 메뉴 '나도 한마디' 안의 여론마당으로 간다.
- 3) 9시 사회자가 집회시작을 알리고 대회사를 올림과 동시에 사이버 집회를 시작한다.
- 4) 사회자가 올린글을 복사해서 계속적으로 여론마당에 올린다.
- 5) 10시 사회자의 인사와 함께 사이버집회를 마친다.

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 위원회

건강연대 서울시 마포구 공덕2동 140-5호 3층 / 전화 711-0835 / 전송 711-0834 / 홈페이지 www.konkang.or.kr /

정부여당은 본인부담인상, 급여축소 등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기만적 종합대책안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여당은 금년 적자 예상액 4조1,978억원 중 적립금 9,819억원을 제외한 순 적자 3조1,289억원을 지역의보 국고 추가지원과 급여제도개선, 보험료징수율 제고 및 외래본인부담금 인상 등 단기대책으로 충당하고, 부족액 1조1,252억원은 금융권에서 차입한다는 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02년부터 5년 동안 매년 9%씩 보험료를 인상하여 차입금을 갚아 재정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당장 본인부담인상 계획을 철회하라!

우리는 수차례 걸쳐 본인부담인상, 급여축소 등의 부당성을 제기하였고, 이번 종합대책안에 국민부담을 늘리는 내용이 들어갈 경우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정부여당에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끝내 저버리고 정부의 무능과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로 발생한 재정위기의 책임을 또다시 국민에게 돌리고 있다. 이미 수가인상으로 외래 환자 1인당 추가적인 부담이 1,850원이나 발생한 상태에서 또다시 1,300원을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보면서 진정 이 정부가 국민을 조급이라도 생각하는 정부인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수가를 인하하고, 부당허위청구 근절책을 마련하라!

반면 재정위기의 해결책으로 노동, 농민,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제기한 수가인하와 부당청구근절대책 부분은 국민의 요구수준과 너무 동떨어져 어떠한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더욱이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 방침은 의약분업의 본래 목적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이제 어렵게 정착되어가고 있는 의약분업을 다시금 되돌리려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다. 또한 부당허위청구가 만연한 상황에서 연 2,079억 원에 불과한 근절책을 제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의사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배려에 다름 아니다. 진료내역통보 등으로 부당허위청구가 근절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부는 가입자의 권리보호와 부당허위청구 방지를 위해 평가원과 공단의 전산을 통합하고, 진료비청구시 의사ID기입을 의무화하며, 보험자인 공단에게 의료기관의 현지조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정부는 재정안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

정부의 재정안정대책은 그야말로 근본적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고 보자는 것에 불과하다. 재정적자의 상당부분을 금융권 차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발상도 알고보면 국민에게 점차적으로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러한 해결방식은 진정 문제의 해결이라기 보다는 ‘연기하는’ 것 뿐이며, 결국 가까운 미래에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 확실하다. 정부여당의 계획에서도 2002년부터 보험료를 인상하고 본인부담금액을 정률제로 전환하는 등 국민의 부담을 늘려 재정파탄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담겨져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종합대책에 단호히 반대하며 다시한번 수가인하와 부당허위청구 근절, 그리고 행위별수가제도의 폐지 등 근본적인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을 요구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번 정부여당의 발표로 정부여당으로부터 더 이상 어떠한 기대도 갖을 수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하였다. 우리 노동, 농민, 시민 공대위는 국민을 기만한 정부여당의 종합대책안 철회 투쟁과 함께 본인부담금인상 반대, 보험수가 인하, 부당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의 요구>

- 건강보험제정 악화의 핵심 원인인 수가인하를 단행하라!
-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여 질병을 악화시키는 본인부담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
- 병원경영투명성확보, 알권리 강화, 심사강화, EDI청구 의무화, 처벌 강화, 심평원과 공단의 기능 강화 등 병의원과 약국의 부당허위청구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하라!
- 의약분업의 근간을 해치는 주사제 제외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가입자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무력화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1. 5. 31

[성명/건강보험정부발표안 규탄]

보건복지민중연대(준)

tel 02 · 774 · 8774 Home <http://pplhealth.jinbo.net>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고, 長考 끝에 幄手라!!
'재정안정 종합대책'이 아닌 '노동자·민중 부담 증가책'
노동자·민중 건강 외면하는 김대중 정부는 물러나라!!!

건강보험재정위기를 둘러싸고, 온갖 논의와 논쟁, 대책이 무수히 나오는 속에서 두 달만에 보건복지부에서 종합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천명한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마련된 대책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사회보험의 원칙마저 후퇴시키면서, 재정안정 효과는 의심스러운 한심한 미봉책이자 국민기만책일 뿐이다.

'국민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했다 하나, 이는 구두선에 그칠 뿐 종합대책은 철저하게 '노동자·민중의 부담 증대'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선 본인부담 상한액을 현행 3천2백원에서 4천5백원으로 올림으로써 40.6%인상되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5.1%인상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또한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가 거센 반발로 유보되었으나 2003년부터 도입하겠다고 하였다. '급여 충실화'라는 원칙은 노동자·민중의 부담의 증가를 가리려는 기만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치석제거,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등에 적용되던 급여를 축소함으로써 년 1,567억원 정도의 부담을 노동자·민중에게 지우는 효과를 낼 것이며, 보험약가의 참조가격제의 실시도 결국엔 약값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기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희귀난치병 환자의 본인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기만이다. 이들 환자들은 대부분 입원을 요하는 환자인데, 본인부담 경감은 외래에 국한되서 실시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이 무슨 본인부담 경감이란 말인가?

둘째, 건강보험의 원래 취지를 훼손시키고,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공식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결국에는 노동자·민중의 건강과 의료서비스를 자본의 '이윤'을 위한 먹이감으로 더욱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종합대책은 재정안정을 위하여 2006년까지 급여확대를 중지하고, 매년 9%의 보험료 인상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건강보험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붕괴시킬 뿐이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노인요양보험의 도입도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제출되지 않는 상태이지만 영리성 민간보험의 형태로 운영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단지 관리만 건강보험공단이 한다고 천명할 뿐이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확충을 위한 방안은 이미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검토되었던 것으로 '재탕삼탕책'일 뿐이다. 더군다나 핵심적인 것은 '기능 확충'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확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으며, 기능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음으로 해서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종합대책에는 지방공사의료원 등 국·공립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지난 5월 중순 정부는 6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서 9월까지 민간위탁하고, 인력을 감축하라고 지시한바가 있다.

셋째,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재정확보 방안마저 노동자·민중의 부담만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노동자·민중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정부는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년도 추가 보험료 인상은 없다고 발표하였으나 결국 2002년 이후에는 보험료 인상 이외에는 다른 수단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2002년 적자규모가 2001년과 동일하고 정부대책에 의한 효과가 정부의 예상대로 나타난다고 가정하더라도 내년에는 총 1조 6,971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이를 보험료로 충당한다면 약 20.5%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약 9%의 보험료 인상과 금융권 차입금을 상환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정부 발표대로 금융권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9%의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총 30%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전자건강보험증은 부당·허위청구 근절 및 진료비의 투명화에 기여하는 효과는 거의 없이 개인의 정보 유출 등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적 보험적용과 기업주의 부담 증가 없이 이루어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가입 편입은 그만큼 노동자의 부담만을 증가시킬 뿐 건강보장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다.

그 외 관리운영 효율화와 심사강화라는 명목 하에 자행되는 인력감축 및 건강보험 연구센터 설치 등은 비상식적이며, 불필요한 중복 투자와 사회보험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해침으로써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원래 목적인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제대로 쓰이는 지를 관리·감시하는 보험자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조치이다.

위와 같이 현 정권이 발표한 종합대책은 건강보험재정지원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과 노동자·민중에게 부담을 떠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사회정책의 파탄에 따른 책임을 또 다시 노동자·민중에게 떠 넘기려는 작태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현 정부는 노동자·민중의 건강을 실현할 능력과 방안이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으며, 따라서 건강보험재정파탄과 노동자·민중의 건강을 보장할 대책 마련에 무능한 현 정부는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다. 현 정부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남이 마땅하다. 만일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 종합대책을 강행할 경우 87년 6월 민중의 함성처럼 전 민중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1. 노동자·민중부담 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종합대책 철회하라!
1. 본인부담 인상 철회하고, 정부와 기업주 부담을 대폭 확대하라!
1. 급여축소 반대한다! 전면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하라!
1. 국민건강 외면하는 김대중정부는 물러나라!

5. 31.

보건복지 민중연대(준)

노동자의힘(준)보건복지기획단, 사회진보를위한 민주연대, 진보와연대를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 평등사회를위한 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건강보험정부발표안 평가]

보건복지민중연대

tel 02 · 774 · 8774 Home <http://pplhealth.jinbo.net>

정부종합대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

1. 노동자 · 민중의 부담 증가가 이번 대책의 핵심적 내용이다.

- 외래 소액환자(의원 1만5천원, 약국 1만원 이하)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현행 3천200원(의원 2천200원, 약국 1천원)에서 4천500원(의원 3천원, 약국 1천500원)으로 40.6% 인상되었음.
- 의료서비스 이용 시 직접 부담해야할 외래 본인부담금 총액은 연 4,229억 증가하였으며, 이를 보험료 인상으로 전환하면 5.1%의 보험료 인상효과를 지니게 됨.
- 보험료 인상을 회피하고, 개인 본인부담인상을 통해 보험재정을 보완하려는 정책방안은 정치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함.
- 공식발표 전 언론을 통해 언급되던 외래 본인부담 30% 정률제 실시는 이에 대한 민중의 거센 반발로 2003년으로 실시가 연기되었을 뿐이며, 건강보험재정 위기를 민중의 부담을 통해 해결하려는 정부의 기본 방향에는 변화가 없음.

2. 민중의 실질적인 건강보장을 위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

1) 건강보험의 보장성 축소

- 2000년 12월 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을 7월 MRI, 초음파, 치면열구전색등 예방서비스 보험급여 방침이 전면적으로 철회되었음.
- 또한 치석제거,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등의 급여인정 기준 강화를 통해 보험급여 항목이 대폭 축소되었음.
- 이는 현재 보장성 수준이 50%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재정안정이란 명목으로 후퇴시키는 명백히 반건강적인 조치임.

2) 민간보험 도입의 공식화

-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재정안정 후 보충적 민간보험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공식화하였음.
- 이러한 조치는 사회보험의 한 형태인 건강보험의 확대를 통해 민중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포기하는 기만적인 행태임.

- 이것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동시에,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반민중적인 조치임.

3. 보험료 인상이외에는 장기적인 재정확보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 정부는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년도 추가 보험료 인상은 없다고 발표하였으나, 결국 2002년 이후에는 보험료 인상이외에는 다른 효과적인 수단이 없음.

- 2002년 적자규모가 2001년과 동일하고, 정부대책에 의한 효과가 정부의 예상대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 총 1조6,971억의 적자가 예상되며, 이를 보험료로 충당한다면 약 20.5% $\{(16,971/82,499) \times 100\}$ 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됨(표 2).

-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2002년부터 보험료인상을 통해 보험재정의 수지균형을 맞추겠다고 발표하였으며, 2002년 - 2006년까지 매년 약 9%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 2001년 연말기준 부족자금 1,125억에 대한 금융권 차입금을 상환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정부 발표대로 금융권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9%의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총 30%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게 됨.

4.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구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하여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의료인력·시설·고가장비의 적정배치, 포괄수가제 실시 등 진료비 지불방식의 개선, 노인요양보험의 도입,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확충과 같은 제도 개선 안을 제시하였음.

- 정부가 제시한 공공의료기관 확충 안을 보면, 전체 의료기관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공기관의 확충을 위한 계획은 배제된 채, 개방형 병원제 도입, 방문간호사업 활성화 등과 같은 낮은 수준의 대책에 머물러 있어, 이윤추구에 골몰하는 상업적 의료체계에 의해 초래되는 건강보험재정파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음.

- 정부가 제시한 노인요양보험의 도입도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제출되지 않는 상태이지만 사회보험형태로 운영되기보다는 영리성 민간보험의 형태로 운영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 영리성 민간보험의 도입은 결코 보험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의료이용의 불평등만을 심화시키게 될 것임.

2001년 5월 31일

보건복지민중연대(준)

노동자의힘(준)보건복지기획단, 사회진보를위한 민주연대, 진보와연대를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기만적인 방법으로 민중건강 위협하는 김대중 정권은 퇴진하라

건강보험 재정파산이 언론에 공개된 후 두 달만에 정부의 종합대책 안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두 달간의 숙고 끝에 발표된 종합대책안은 책임 회피와 정권 재창출에만 관심이 있는 정권의 무능력한 모습을 다시 한 번 드러냈을 뿐이다.

보험료 인상 연기·본인부담금 집중 인상 : 기만적인 방법으로 노동자·민중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정부는 당장의 보험료 인상이 없음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대책이 "무엇보다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대원칙 하에 검토됐다"고 자평 했다. 그러나 외래 소액진료비(의원 1만5천원, 약국 1만원 이하)의 본인부담금이 현행 3천200원(의원 2천200원, 약국 1천원)에서 4천500원(의원 3천원, 약국 1천500원)으로 40.6% 인상되었으며, 2003년부터는 전체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 정률제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더구나 내년부터 5년간 보험료를 매년 8~9% 인상하여 2006년에는 임금의 3.4%인 직장의료보험료가 5.2%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보험료 인상 시기를 미루고, 개인 본인부담인상을 통해 보험재정을 보완하려는 이 같은 대책은 내년 대선을 고려해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조삼모사식 대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재정안정화만을 목표로 민중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재정위원회는 작년 12월, 보험료 인상을 결정하면서 올해 7월에 MRI·초음파·예방서비스 등을 보험급여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안에서 이 약속은 폐기되었다. 더군다나 신경차단술, 물리치료, 한방관절강내침술 및 치석제거술 등의 급여 인정 기준을 더욱 까다롭게 하였다. 또한 정부는 이번 대책안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민간의료보험은 고가치료, 고가약품 등 비급여 항목들을 다루는 것으로서, 이것이 도입될 경우,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를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진료비의 절반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건강보험 기능을 더욱 약화시키는 이 같은 대책은, 재정안정화와 정치적 안정화만을 위해 민중건강을 내팽개치는 정권의 무책임함을 여지없이 보여줄 뿐이다.

건강보험 재정 파산을 해결하고 민중건강을 보장하지 못한다.

정부는 중장기 대책으로 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하는 포괄수가제 및 총액예산제 도입,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계획함과 동시에,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보건소 기능 강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포괄수가제와 총액예산제는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전자보험증 도입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심각한 독을 품고 있는 제도이다.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제시된 구체적 내용들 도 개방형 병원제 도입, 방문간호사업 활성화 등, 공공의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대책들만 제시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 대책안에서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률 50% 확대"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으나, 이를 법제화할 계획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당장의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다.

이번 건강보험재정 파산의 근본적 원인은 고질적으로 취약한 국가와 자본의 부담, 그리고 상업적 의료체계 자체에 있다. 국고지원율과 노동자 보험료에 대한 자본가 부담률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보험료를 누진적으로 징수하는 한편, 현재 10% 미만에 머무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것만이 건강보험재정 위기를

잠재우면서 민중건강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러한 개혁안들이 제외된 현재의 대책은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갖가지 부작용만 불러일으키면서 재정위기를 만성화시킬 뿐이다.

이번 종합대책안을 통해 김대중 정권은 민중건강을 실현한 의지와 능력이 없음이 드러났다. 우리는 조삼모사식 정책들을 남발하며 위기 회피에만 급급한 이 정권에게 더 이상의 어떠한 기대로 갖지 않는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 질 때까지 노동자 민중들과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1. 기만적인 방법으로 노동자·민중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종합대책을 즉각 철회하라!
1. 급여범위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인하하라!
1. 민간의료보험 도입 시도 즉각 중단하라!
1. 자본가 부담률 증대하고, 보험료를 누진적으로 징수하라!
1. 민중건강 위협하는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